

#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핀란드화'(Finlandization) 아젠더 분석

차문석

## <목 차>

- |                      |                  |
|----------------------|------------------|
| I. 서론                |                  |
| II. '핀란드화'와 동북아      | IV. 한반도 문제와 핀란드화 |
| III. '핀란드화' 아젠더의 계보학 | V. 결론            |

## <국문 요약>

21세기에 들어와 한반도 문제에서 '핀란드화' 개념을 경유해서 전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개념은 '외교정책에서 자국의 주권을 보장받는 대신 주변강대국에 도전하지 않는 정책'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최근 회자되는 '핀란드화' 논의들을 계보학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가 지향하는 영역과 공간들을 추적하여 분석한다. 핀란드, 우크라이나, 대만 등의 사례에서 보여진 '핀란드화' 논의의 의미를 다루었고, 한반도 '핀란드화' 논의의 역사적 경과들도 정리하고, 21세기에 핀란드화의 또다른 재생 구조를 검토하였다. '핀란드화' 연구는 미중 간 헤게모니 경쟁과 대립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반도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전략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을 통해 '핀란드화' 아젠더가 갖는 비판성을 극복하고 한반도 미래(평화와 통일)에 대한 자주적 견해 생산을 지향하고자 한다.

※ 주제어: 핀란드화, 중립정책, 핀란드 외교정책, 한반도 핀란드화

##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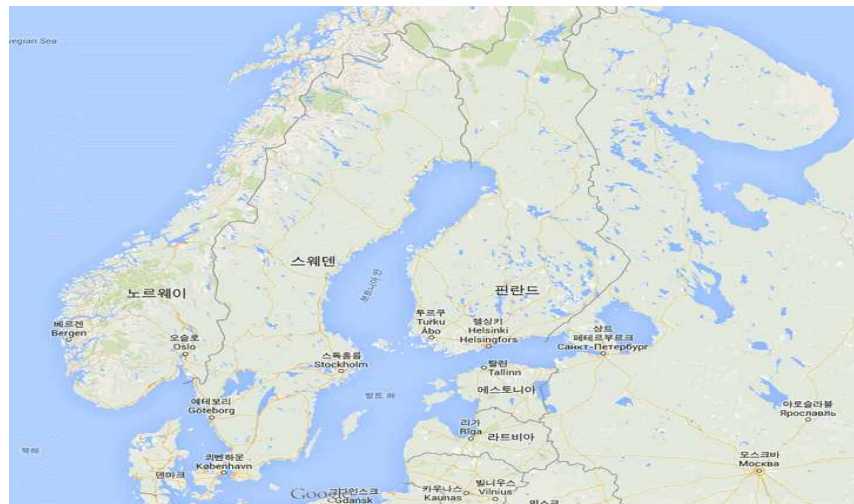
### 1. 문제 제기

본 연구는 핀란드화(Finlandization)의 복잡한 현실 적용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분단 문제, 통일 문제 등—을 사유하고 성찰함에 있어서 '핀란드화'(Finlandization: 핀란드의 역사, 경험, 정책 지향 등)라는 아젠더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유하고자 한다. '핀란드화'라는 용어는 20세기에 이루어졌던 핀란드의 외교 정책과 생존 전략에서 유래하였는데, 핀란드처럼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약소국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 실행하는 독특한 중립적인 외교 전략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해 왔다. 핀란드의 케코넨(Urho Kekkonen) 대통령은 “핀란드화는 수출용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sup>1)</sup> 이는 핀란드의 역사적 경험과 핀란드의 대외 정책은 대단히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핀란드 외부에 핀란드화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간 복잡한 인식론과 방법론을 요하는 문제이다.

핀란드(공식명칭은 '핀란드 공화국' Republic of Finland)는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1) 제러드 다이아몬드 지음, 강주현 옮김, 『대변동』 (서울: 김영사, 2019), p.120.

나라로서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서쪽으로는 스웨덴,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독일과 마주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인구는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작은 국가이며 수도는 헬싱키이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핀란드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러시아의 자치 구역 중 하나에 불과하였고 유럽 국가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빈곤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핀란드는 세계에서 과학기술과 공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고 1인당 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독일과 비교될 정도로 부국이 되었다. 핀란드는 자신만의 매우 독특한 중립정책, 이른바 소련에 대한 우호적인 외교정책을 통해서 평화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부유한 국가로 급속하게 발돋움할 수 있었다.<sup>2)</sup>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핀란드화’라는 용어는 오늘날까지 그 의미가 확정적이지는 않으며 해석상으로도 명료하지 않으며 다소간 논쟁적인 상황에 열려져 있는 용어이다. 현재 핀란드를 바라보는 국가들마다, 학자들 및 논자들마다 ‘핀란드화’는 매우 다르게 사용된다. 가령, 대체로 독일권 학자들은 핀란드화를 핀란드를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물론 한국에서도 ‘핀란드화’를 ‘속국’으로 번역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sup>3)</sup>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외교정책이 유연하며 현실적이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핀란드화’를 매우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외교정책이나 그 결과로서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sup>4)</sup>

한편, 21세기에 들어와 한반도 문제-남북 분단 문제, 통일 문제 등-을 ‘핀란드화’라는 개념을 경유해서 전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이유에서 그러한데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환경적 요인은 동북아 및 한반도 역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광범위한 경제, 안보, 헤게모니 경쟁 및 대립이다. 중국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수준으로 강대국 위상을 수립하는 상황에 있으며, 반대로 미국의 글로벌 및 동북아 전략(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해서)은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는 목표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해결책을 구하는 과정에서 ‘핀란드화’라는 개념이 성찰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핀란드(화)에 대한 관심은 호기심 이상의 것이 되고 있다. 핀란드와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2) 김진호, “핀란드의 편승적 중립정책”, 『세계정치 11』제30집 1호(2009), pp.91-92.

3) 문정인, “한반도 통일과 통일외교의 재조명”, 『철학과 현실』, 2015. 12, p.132.

4) 대표적인 연구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지음, 강주현 옮김, 『대변동』 (서울: 김영사, 2019).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핀란드와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역사 구조적으로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핀란드가 러시아와 독일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존재했던 구조와, 4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의 구조를 유비시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핀란드와는 달리 한반도는 분단 문제 해결도 생존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를 더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핀란드’의 핀란드화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세계 각지에서 핀란드화가 의제로 등장하는 지역, 가령, 우크라이나나 대만 등 해외의 다양한 ‘핀란드화’ 관련 연구 사례들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해 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현시기 ‘핀란드화’ 아젠더가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고, 이러한 유통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그러한 과정에서 구성되는 콘텐츠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 그리고 핀란드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의 극복에 유용한 성찰을 생성해 보고자 한다.

## 2. ‘핀란드화’ 선행 연구들

먼저 ‘핀란드화’에 대한 국내 연구는 나름대로 매우 진지하지만, 연구의 양에서는 다른 정치학, 사회과학, 지역학 분야의 주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다소 미미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핀란드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면적인 것을 벗어나 다양한 성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의 선구적인 연구로는 지정일(1983), 이기탁(1983) 등의 연구가 있다. 지정일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존재하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의 안보정책을 다루면서 핀란드를 연구하였다.<sup>5)</sup> 이기탁은 핀란드의 중립적인 외교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sup>6)</sup> 강광식(1989)의 연구도 빼놓을 수 없는데, 핀란드의 중립화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지를 모색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sup>7)</sup> 그리고 1990년대에는 하용출/박정원(1998)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유럽 국가들의 외교 사례를 연구하면서 특히 약소국가가 취하는 자주외교 전략의 사례를 핀란드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sup>8)</sup>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소간 20세기보다는 활발하게 지역연구가 진행된 덕분에 핀란드에 대한 연구도 영역이 확장되고 그 양도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연구가 김진호(2003), 김진호/강병철(2007)의 연구이다. 이들은 주로 ‘중립화’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핀란드를 연구하였는데, 김진호(2003)는 핀란드 외교정책을 연구하였고,<sup>9)</sup> 김진호/강병철(2007)은 스웨덴과 핀란드를 중립화 모델로 비교 연구하였다.<sup>10)</sup>

강명세(2007)는 핀란드의 생존 방식을 오스트리아와 병행해서 다루고 있는데, ‘약소국의 생존정책’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sup>11)</sup> 박후건(2007)은 중립화 노선에서 핀란드의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이를 한반도 문제에 견주어 연구하였다.<sup>12)</sup> 한편, 김진호(2009)는 중립

5) 지정일, “스칸디나비아 諸國의 안보정책”, 『유럽연구』, 제1권(1983), pp.139-163.

6) 이기탁, “핀란드의 중립외교정책(1941-1983)”, 『유럽연구』, 제1권 (1983), pp.127-138.

7) 강광식, 『중립화 정치론: 한반도 적용 가능성 모색』(서울: 인간사랑, 1989).

8) 하용출, 박정원, “약소국의 자주외교전략: 유럽 사례를 통해 본 가능성과 한계”, 『전략논총』, 제9호(1998), pp.8-60.

9) 김진호, “핀란드 중립정책에 대한 고찰과 교훈”, 『통일문제연구』, 제15권 1호 (2003), pp.241-242. .

10) 김진호, 강병철, “스웨덴과 핀란드의 중립화의 정치: 국제-지역-국내 정치의 다이내믹스”, 『유럽연구』, 제25권 제3호 (2007), pp.49-87;

11) 강명세, “약소국의 생존정책”, 『세종정책연구』제3권 1호(2007).

12) 박후건, 『중립화 노선과 한반도 미래』(서울: 선인, 2007).

(neutrality)과는 달리, ‘편승외교’라는 입장에서 핀란드의 외교정책을 연구하였다. 특히 동맹에 의존할 수 없는 나라가 강대국에 편승(bandwagoning)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편승외교’로 보고 연구하였다.<sup>13)</sup> 또한 장은주(2009)는 핀란드가 1939년에 소련과 치렀던 100일간의 ‘겨울전쟁’을 중심으로 북유럽, 특히 핀란드의 중립정책을 연구하였다.<sup>14)</sup>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안상욱(2017)과 서현수(2018)의 연구가 있다. 안상욱은 핀란드의 외교정책 변화를 냉전, 탈냉전, 유럽통합과 함께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특히 소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sup>15)</sup> 서현수는 20세기 핀란드의 중립 평화 외교정책이 형성, 발전, 진화해 온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다이내믹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였다.<sup>16)</sup>

한편 국외에서 핀란드화 연구는 국내보다는 훨씬 오래되었고, 따라서 그 영역도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1950년대 당대와 1960-80년대의 연구들로는 2차 세계대전 말 핀란드-소련 관계를 정립하여 냉전시기 핀란드 중립외교정책의 기틀을 닦은 파시키비(Juho Kusti Paasikivi)의 외교정책에 대한 Allan A. Kuusisto(1959) 등<sup>17)</sup>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핀란드의 중립외교정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R. M. Wharton(1978), Sakari Saridla(1982), Kent Forster(1979) 등<sup>18)</sup>의 연구가 있다.

좀 더 최근에는 Tuomas Forsberg & Matti Pesu(2016) 등<sup>19)</sup>의 연구가 있는데, 핀란드의 핀란드화라는 독특한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 이 연구는 핀란드화의 이상형, 역사적 모델, 그리고 핀란드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의외로 제러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 2019)가 핀란드화의 연구에 합류하였는데, 그는 『Upheaval』(2019)이라는 단행본에서 “핀란드와 소련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핀란드화를 연구하였다. 다이아몬드는 핀란드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자로 규정할 수 있다.<sup>20)</sup>

## II. ‘핀란드화’와 동북아

### 1. 핀란드화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핀란드화’라는 개념은 냉전 체제가 종결되기 직전까지 핀란드가 소련의 외교정책에 자국의 외교정책을 종속시키는 방향을 유지한 전략을 의미하며, 핀란드의 경험 이후에 대체로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13) 김진호, “핀란드의 편승적 중립정책”, 『세계정치 11』제30집 1호(2009).

14) 장은주, “겨울전쟁과 북유럽의 중립정책”, 『세계역사와문화연구』 20호(2009).

15) 안상욱, “핀란드 외교정책 변화: 러시아 의존성 약화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5권 4호 (2017), pp.65-88).

16) 서현수, “핀란드 중립 평화 외교정책의 형성과 진화”, 『스칸디나비아연구』제22호(2018).

17) Allan A. Kuusisto, “The Paasikivi line in Finland’s Foreign Polic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1(1959), pp.37-50.

18) R. M. Wharton, “Finlandization-Neutering of a Nation”, *Human Events*, Vol.38, No.15(1978), pp.8-13; Sakari Saridla, “Finland and Finlandization”, *History Today*, Vol.32, No.3 (1982), pp.20-27; Kent Forster, “Finland’s Foreign Policy 1940-41: An Ongoing Historiographic Controversy”, *Scandinavian Studies - Menasha -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candinavian Study*, Vol.51, No.2(1979), pp.109-124.

19) Tuomas Forsberg & Matti Pesu, “The Finlandization of Finland: the Ideal Type, the Historical Model, and the Lessons Learnt”, *Diplomacy & Statecraft*, Vol.27, No.3(2016), pp.473-495.

20) 제러드 다이아몬드, 앞의 책. pp.77-121.

‘핀란드화’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련과 관계정립에서 핀란드와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학자들이 핀란드 상황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953년에 출판된 “Befreiung und Freiheit”라는 오스트리아의 한 논문에서 그루버(Karl Gruber, 1953)는 “핀란드식 정치”(Finnish Politik)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후 ‘핀란드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1)</sup>

## 1) 부정적 개념으로서의 핀란드화

20세기를 통틀어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오랫동안 ‘핀란드화’라는 용어에는 매우 비판적이며 굴욕적 해석이 따라붙어 다녔다. 핀란드화라는 용어는 강대국들에 인접한 약소국들의 굴욕적인 외교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기도 하였고, 또한 실제 핀란드의 이러한 역사적 정책에 ‘핀란드화’라는 경멸적인 딱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취급하기도 하였다.<sup>22)</sup>

‘핀란드화’는 또한 1960년대와 1970년대 서독에서 진행된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 이미 경멸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독일과 NATO 가입국들에서는 핀란드화를 한 국가가 자주 독립을 유지하면서 대외 정책은 자기 주변에 있는 큰 국가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였다. 크게 두 개의 국제관계 사례를 드는데 사용하였는데, 첫째, 냉전 시기에 핀란드와 소련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둘째, 1871년부터 1940년까지 덴마크와 독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핀란드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대표하는 인물은 서독의 국방장관이었던 프란츠 요세프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ss)<sup>23)</sup>였는데, 그는 핀란드화를 소비에트화의 위협을 감지하지 못한 국가들이 맞이하게 될 필연적 운명이라고 폄하하였다.<sup>24)</sup> 그는 독일이 미국의 정책을 더 많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독일의 정치학자인 월터 할스타인(Walter Hallstein)과 리처드 뢰벤탈(Richard Lowenthal) 등에 의해서도 핀란드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독일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서독의 빌리 블란트의 동방정책에 대해서 NATO국가들이 비판할 때도 핀란드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독일이 NATO의 상호주의 전략을 의심할 때도 사용하였다. 한편 노르웨이의 닐스 웨르빅(Nils Ørvik)의 경우는 핀란드화를 약소국가가 독립적인 정치제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정부 요직에 친소련적인 인사를 임명하여 소련의 원격조정을 당하는 국가현상으로 정의하였다.<sup>25)</sup>

1979년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서 멜빈 라스키(Melvin J. Lasky)도 또한 부정적으로 핀란드화를 정리하였다. 그는 “전체주의적 초강대국의 군사적 정치적 무자비함에 위압되어 그 옆에 있는 작고 약한 국가가 체면을 버리고 당혹스러운 정도로 자주적인 자유를 양보하는 개탄스러운 상황”<sup>26)</sup>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 라스키와 같이 핀란드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핀란드 정책을 비열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21)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기택, “핀란드 중립외교정책(1914-1983)”, 『유럽연구』, 창간호(1983), pp.129-130을 참조. 또한 김진호, “핀란드 중립정책에 대한 고찰과 교훈”, 『통일문제연구』, 제15권 1호 (2003), pp.241-242을 참조할 것.

22) 제레드 다이아몬드, 앞의 책, p.119

23) 독일의 정치가로서 바바리아 기독교사회연합의 지도자였다. 히틀러의 나치당과 충돌을 일으킨 가톨릭 청년조직의 열성적인 당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24) Roy Allison, *Finland's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1914-1984*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5), p.2.

25) Ibid., p.4.

26) Melvin J. Lasky, “Finlandization: Not the Worst Fate”, *The New York Times*, June 14, 1979.

## 2) 긍정적 개념으로서의 핀란드화

핀란드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핀란드화를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시기적인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데이비드 바이탈(David Vital, 1971)은 자신의 저서 『*The Survival of Small States*』에서 핀란드화를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분쟁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한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a paradigm for the future)이라고 가치를 부여하였다.<sup>27)</sup>

또한 로버트 에스핀돌라(Robert Espindola, 1987)도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s)라는 논문에서 핀란드화가 초강대국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나라들에게 명쾌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간주하였다.<sup>28)</sup> 한편, 요한 블로이안테스(Johan Vloyantes, 1989)는 “핀란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신중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는 핀란드화를 핀란드 외교정책의 기본 토대이자 핀란드 국민들의 이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로 보았다.<sup>29)</sup>

## 3) 핀란드가 보는 핀란드화

그렇다면, 과연 핀란드인들은 핀란드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막스 야콥슨(Max Jakobson, 1967)의 설명이다. 그는 핀란드의 유엔대사를 역임하였는데, 핀란드화가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첫째, 초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국가가 힘이 지배하는 현실에 맞게 정책을 짜야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핀란드가 현실에 적극해 나가는 과정에서 핀란드의 국가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sup>30)</sup> 핀란드 정치학자 하르토 하코비르타(Harto Hakovirta, 1989)는 핀란드화를 정의하기를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협력에 관한 선구적인 형태와 관습’이라고 주장하였다.<sup>31)</sup>

한편, 우르호 케코넨(Urho Kekkonen) 핀란드 대통령<sup>32)</sup>의 집권 시기 1968년 이후 대 소련 정책을 가리킬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실 핀란드에서는 핀란드화가 비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약소 국가가 자신과 인접해 있는 초강대국과 협상을 하면서 주권을 유지하는 행위로 이해하였으며 다만 핀란드가 핀란드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존’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케코넨 대통령이 일갈한 “핀란드화는 수출용이 아니다”라는 말은 핀란드가 핀란드화를 생각하는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는 말이다. 최근에 구스타프 만네르하임(Gustaf Mannerheim)의 전기를 쓴 스티븐 잘로거(Steven Zaloga, 2015)는 핀란드는 “지독히 고약한 선택 중 그나마 나은 것”을 협상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sup>33)</sup>

27) David Vital, *The Survival of the Small States: Studies in Small Power/Great Powe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pp.99-117. 김진호, “핀란드 중립정책에 대한 고찰과 교훈”, 『통일문제연구』 2003년 상반기호, p.242에서 인용.

28) Robert Espindola, “Security Dilemmas”, C. Clarke, et al. (ed.), *Politics, Security and Development in Small States* (London: Allen & Unwin, 1987), pp.75-78.

29) Johan Vloyantes, “Finland”, S. V. Papacosma, et. at. (ed.), *Europe’s Neutral and Nonaligned States: Between NATO and the Warsaw Pact* (Delware: SR Books, 1989), pp.137-155.

30) Max Jakobson, *Finnish Neutrality* (New York: F.A. Praeger, 1967), p.110. 김진호, 앞의 논문, p.243에서 인용.

31) Harto Hakovirta, *East-West Conflict and European Neutrality* (Oxford: Claredon Press, 1989), pp.70-71. 김진호, 앞의 논문, p.243에서 인용.

32) 핀란드의 정치인으로서 제8대 공화국대통령이었다. 1956-81년까지 25년 장기집권한 핀란드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대통령이었다.

33) Steven Zaloga, *Gustaf Mannerheim* (Osprey, Oxford, 2015).

#### 4) 핀란드화를 부정한 사례들의 역사적 결과

핀란드화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현실적 근거를 다른 역사적 경험과 사례에서 찾아 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1939년의 폴란드, 1941년의 유고슬라비아, 1956년의 헝가리 등이 독일 혹은 독일과 소련의 요구를 거부하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섰지만 핀란드처럼 결과가 좋지 않은 않았다. 그들 모두는 점령당했고 그로 인해 커다란 국가적 고통을 당했다.<sup>34)</sup>

반면에 정반대로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 1939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1945년 일본은 군사적 상황이 절망적이라 판단하여 각각 독일, 소련, 미국에 항복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핀란드화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 결과를 더 많이 유도한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sup>35)</sup>

요컨대, 부정적 긍정적 평가를 떠나서 ‘핀란드화’라는 개념은 약소국의 자율(autonomy)에 대해서 인접한 초강대국이 가하는 제한과 제약들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핀란드화를 고찰한다.<sup>36)</sup> 첫째, 핀란드-소련의 우호조약을 통해서 핀란드가 하나의 국가로서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실현했다. 둘째, 소련은 핀란드의 내정에 불간섭하게 되었다. 셋째, 핀란드는 이념적으로 유럽 국가이면서 소련과 기본적인 신뢰유지에 우선성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는 안전과 자치를 위하여 타국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한반도 문제에 적용할 때 중요한 성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2. 핀란드의 외교정책

핀란드는 오랫동안 스웨덴과 러시아에 지배를 받았다. 1809년까지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자 독일 제국의 힘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였다. 핀란드는 독립을 선언했고, 곧바로 내전에 돌입하게 된다. 보수적인 백군은 독일이 훈련시킨 핀란드군으로 구성되었고 독일군이 들어와 이를 지원했다. 이들에 대항한 측은 핀란드군으로 구성된 적군과 핀란드 주둔 러시아군이였다.<sup>37)</sup> 1918년 5월에 백군이 승리를 거두었다. 1918-20년에는 삼국 협상과 함께 러시아 내전에 선전 포고 없이 참여하였다. 1922년에 핀란드는 폴란드와 동맹을 결성하였다. 1930-39년 중립의 입장을 가지고 있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노선을 공유했으며, 1940년 소련에 대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세력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고 1941년 전쟁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독일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핀란드는 19세기의 전통으로 회귀하였다. 핀란드 지도자들은 소련에 대항할 수 없었고, 핀란드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제 세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치 독일은 이미 약화되고 있었고, 스웨덴은 여전히 미약한 나라여서 반러시아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서방 국가들은 소련과 동맹 관계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핀란드는 주변 강대국의 보호 없이 혼자서 소련과 맞서야만 했는데, 19세기에 핀란드가 취했던 것처럼 핀란드는 소련의 대외정책을 반대하지 않으면서 독립을 지키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34) 제러드 다이아몬드, 앞의 책, p.124

35) 제러드 다이아몬드, 앞의 책, p.124

36) 김진호, 앞의 논문, p.243에서 정리하였다.

37) 제러드 다이아몬드, 앞의 책, p.89.

## 1) 파시키비(Paasikivi) 정책

핀란드는 소련과 두 차례 전쟁을 치렀다. 이른바 ‘겨울전쟁’(1939.11.30.)과 ‘계속전쟁’(1941.6.26.-1944.9.6.)이 그것이다.<sup>38)</sup> 이 전쟁을 휴전하면서 핀란드는 핀란드 영토에 잔류한 독일군을 적극적으로 축출하고, 핀란드와 소련 쌍방은 타국을 적대시하는 동맹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였하였다. 전쟁 이후 핀란드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지도자로서 당시 수상이었던 유호 쿠스티 파시키비(Juho Kusti Paasikivi)<sup>39)</sup>가 부상하였다.

파시키비는 핀란드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정학적인 현실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파시키비는 핀란드에 대해 소련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는 소련의 북부 국경의 안전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핀란드는 소련에게 이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정책을 취하였다.

파시키비가 1944년 12월 6일에 행한 연설은 파시키비의 현실주의를 잘 보여준다. “장래에 우리의 거대한 이웃과 친선관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철천지 원수로서 소련에 대한 증오, 실지 회복주의 감정과 문화적인 열등감 등을 일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40)</sup> 그의 이러한 신념은 핀란드 정치 현실에서 기각되었다. ‘겨울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핀-소 협상 시에 스웨덴 주재 공사로서 그는 이러한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전쟁을 통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난 뒤에서야 파시키비의 신념에 주의를 기울여졌고, 1948년에 드디어 햇볕을 보게 되었다.<sup>41)</sup>

파시키비의 핀란드 외교정책의 근간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핀란드에 대한 소련의 관심사는 소련의 서북방 국경방위라는 전략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 둘째, 핀란드의 안보는 소련에 달려있다. 셋째, 소련의 전략적 관심사와 핀란드의 독립보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핀-소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소련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제거해야 한다.<sup>42)</sup> 파시키비는 핀란드의 지정학적 현실에 알맞게 외교정책을 고민했으며, 당시 핀란드의 국제적 위상을 충분히 고려하였다.<sup>43)</sup> 이러한 파시키비의 구상은 1948년의 핀란드의 중립정책으로 구현되었으며 이는 핀란드의 가장 적절한 생존 전략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2) 핀란드의 선택: 핀-소 조약

1947년 말에 핀-소 간에 평화조약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 소련과 서구와의 전시동맹은 붕괴되었다. 따라서 핀란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혼자서 생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파시키비 대통령이 취한 정책은 소련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1947년 파리 조약에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핀란드의 대외 관계는 소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파시키비의 정책을 실행하였다.

38) 이 전쟁의 원인과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앞의 책, pp.95-11을 참조할 것.

39) 핀란드의 7대 대통령으로서 1946-1956년에 재임하였다.

40) Roy Allison, *op. cit.*, pp.12-16.

41) 김진호, 앞의 논문, p.244.

42) 파시키비가 보기에 이데올로기는 국내정치적 분야에 속했다. 핀란드의 과도한 이데올로기 추구는 국가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43) 김진호, 앞의 논문, pp.244-245.



1948년 4월 6일, 핀란드와 소련은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때 체결한 협정의 내용은, 핀란드는 독일 및 동맹국의 핀란드 및 소련을 향한 공격에 저항할 의무가 있고, 필요하다면 소련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핀란드는 냉전 시기에 중립 국가가 되었다. 이 협정과 중립화에 따라 핀란드는 마셜 계획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소련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키게 되었다. 그리고 NATO 및 서방 군사 세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바르샤바 조약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1948년의 핀-소 조약 이후 핀란드의 상황은 레이몽 아롱(Raymond Aron, 1962)의 언급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롱은 그의 저서 『*Paix et Guerre entre les nations*』(평화와 전쟁)에서 “핀란드는 다원주의적 입헌주의 정치제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으며, 어떠한 블록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대국 소련과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는 다만 반독립(‘une demi-independance’)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핀란드는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스크바의 동의를 간청하며 또한 그의 막강한 이웃에 의하여 허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양보를 하는 것을 감수하기 때문이다.”<sup>44)</sup>

### 3) 핀란드화와 소련화

핀란드화는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소련화’(Sovietization)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핀란드의 ‘소련화’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핀란드화’는 일정 정도의 ‘소련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핀-소 조약 직후 소련화 경향은 미미하였지만, 1968년 이후 핀란드에서는 적어도 대중 매체는 소련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핀란드 매체에서 반소련주의는 자체 검열되었다. 핀란드의 정치인들과 기자들은 2차 대전 당시 소련의 행동이나 소련의 정치범 억압을 언급하지 않았다. 도서관과 서점에서 반소련주의 도서는 유통할 수 없었고, 금서목록도 관리되었다. 핀란드에서 반소련 영화도 상영이 금지되었다.<sup>45)</sup>

한편 UN인권 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망명은 적어도 소련인에 대해서는 핀란드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소련인이 핀란드로 망명할 경우 핀란드 당국은 망명자들을 소련으로 돌려보냈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이후에야 핀란드에서 대중매체들은 소련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는 중앙유럽 국가들에서 非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했으며 핀란드를 그 모델로 제시하였다.<sup>46)</sup>

핀란드의 정책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쓰라린 현실로부터의 경험에 의한 성찰 덕분이었다. 핀란드의 역사에서 생존과 독립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고, 소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핀란드를 신뢰할 때 핀란드도 안전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 3. 핀란드화와 동북아: 성찰의 지역적 변용

21세기에 들어와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 평화 체제 문제 등 총체적인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서 ‘핀란드화’라는 개념과 아젠더가 이전보다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실 ‘핀란드화’란 핀란드와 소련의 관계사에서 도출된 용어이고 ‘어떤 국가가 외교 정책에

44) Raymond Aron, *Paix et Guerre Entre le Nations* (Paris: Calman-Levy, 1962), p.501.

45) 1962년 존 프랑켄하이머가 감독한 [더 만주리안 캔디데이트], 1970년 카스파르 뢰데가 감독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1986년 레니 하를린이 감독한 [본 아모리칸] 등이 있다.

46) 제러드 다이아몬드, 앞의 책, p.116.

있어서 자국의 주권을 보장받는 대신 그 국가에 인접한 주변강대국에 도전하지 않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의 '핀란드화' 아젠더는 이른바 장래의 (통일) 한국과 주변 강대국(중국 혹은 미국)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천착한 아젠더라고도 한다.

## 1) 핀란드의 핀란드화

일단 여기서는 [핀란드의 핀란드화]로부터 논의를 개시한다. 핀란드의 핀란드화의 특수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들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구별되어야 한다. 즉 핀란드의 케코넨 대통령이 언급했던 “핀란드화는 수출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의 그 핀란드화의 의미들을 구별해 내어야 한다.

다른 국가들에게는 있으나 핀란드에서는 없었던 것을 먼저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J.Diamond, 2019는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sup>47)</sup> 첫째, 핀란드는 '동맹국가들의 지원'이 없었다. 둘째, 핀란드는 '본받을 만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핀란드는 '지정학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될 상황이 아니었다.

먼저, 핀란드는 '겨울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동맹의 지원을 바랐지만 잠재적 혹은 전통적인 우방 어느 곳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sup>48)</sup> 게다가 핀란드는 소련과 나치 독일의 요구에 저항하는데 성공한 작은 나라들의 사례를 구할 수가 없었다. 가령, 발트 3국은 그런 요구에 응하며 독립을 상실하였으며,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는 이에 맞서 저항했으나 처절하게 정복당하고 말았다. 물론 영국은 자체의 군사력으로 저항하는데 성공한 경우였긴 하지만 영국은 핀란드보다 훨씬 강대국이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나치 독일의 요구를 수용<sup>49)</sup>하며 독립을 유지하긴 했지만 소련이 핀란드에게 요구한 조건보다는 훨씬 가벼운 것이었다. 따라서 “핀란드화는 수출용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핀란드가 소련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외줄 타기 정책을 본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없었다.<sup>50)</sup> 핀란드는 강대국인 소련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정학적 제약으로 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한받았던 나라이다.

## 2) 핀란드화의 동북아적 변용

핀란드화를 동북아와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의 변용을 시도할 수 있다. 하나는 핀란드 자체의 경험적인 요소들로부터 핀란드화의 테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핀란드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장점을 한 축으로 하고, 파시키비의 핀란드 외교정책의 근간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해서 핀란드화의 교훈을 정리하는 것이다.

첫째, 핀-소 우호조약을 통해 핀란드는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실현했다. 둘째, 핀란드는 이념적으로 유럽 국가이면서 소련과 기본적인 신뢰유지에 우선성을 두었다. 셋째, 핀란드는 안전과 자치를 위하여 타국에 의존하지 않았다. 넷째, 소련의 전략적 관심사와 핀란드의 독립보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추구했다. 다섯째, 새로운 핀-소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소련의 신뢰를 얻었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섯째, 양국 간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제거했다. 이를 단순화하면 <표1>과 같다.

47) 제러드 다이아몬드, 앞의 책, p.125

48) 스웨덴이 비정부적 차원에서 약 8,000명의 지원을 제공하고 핀란드 어린이들의 파란을 받아들였고, 독일은 계속 전쟁동안 군사 및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원조를 제공했을 뿐이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앞의 책, p.125.

49) 이는 나치 독일이 핀란드에게 요구한 것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었다.

50) 제러드 다이아몬드, 앞의 책, p.125.

<b>&lt;표1&gt; 핀란드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변용적 요소</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호조약을 통한 평화와 안보 실현</li> <li>2. 신뢰유지에 우선성</li> <li>3. 자주적인 방식</li> <li>4.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 추구</li> <li>5. 신뢰의 제도화</li> <li>6. 이데올로기적 대립 제거</li> </ol>

출처: 필자 작성.

또 다른 방식은 제러드 다이아몬드(J.Diamond, 2019)가 분석했던 방식이다. 다이아몬드는 핀란드,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독일, 그리고 호주를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위기 전개의 양상과 해결 및 극복과정을 분석하였다. <표2>는 국가적 위기의 결과와 관련한 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b>&lt;표2&gt; 국가적 위기의 결과와 관련한 요인</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적 합의</li> <li>2. 국가적 책임의 수용</li> <li>3. 울타리 세우기</li> <li>4. 다른 국가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li> <li>5. 본보기로 삼을 만한 다른 국가의 사례</li> <li>6. 국가 정체성</li> <li>7. 국가의 위치에 대한 정직한 자기평가</li> <li>8. 역사적으로 과거에 경험한 국가 위기</li> <li>9. 국가의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li> <li>10.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li> <li>11. 국가의 핵심 가치</li> <li>12. 지정학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li> </ol>

출처: 제러드 다이아몬드, 앞의 책, p.70에서 요약.

<표2>의 12가지 요소들을 핀란드에 적용시키면 대략 7개 요인이 핀란드의 근본문제에 도움을 주었고, 3개 요인은 걸림돌이 되었다. 나머지 1개 요인은 방해 요인에서 도움 요인으로 변했다.<sup>51)</sup> 핀란드가 위기 해결을 위해 확실하게 보여준 요소들(7개 요소)을 동북아적 변용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표2>의 요소들 중 ‘다른 나라의 지원’, ‘다른 국가의 사례’, ‘지정학적 요인으로부터의 해방’ 등은 핀란드에 부재하였다.

51) 제러드 다이아몬드, 앞의 책, p.121.

### <표3> 핀란드의 해결 요소

- 국가적 책임의 수용
- 울타리 세우기
- 국가 정체성
- 국가의 위치에 대한 정직한 자기평가
- 국가의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
-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
- 국가의 핵심 가치

<표3>의 핀란드 경험에 근거해서 동북아적 변용 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핀란드는 책임을 수용하고 정직하고 현실적인 자기평가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소련군의 침략으로 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핀란드의 재평가는 대단히 냉정했다. “핀란드는 작은 나라이고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 동맹들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생존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국에 있다. 소련에 얼마 동안은 저항하며 침략을 늦추었고, 소련에 호된 대가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영원히 저항할 수는 없었다”라는 현실을 인정하였다.<sup>52)</sup>

둘째, 핀란드는 선택적 변화와 울타리 세우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1944년 이후 핀란드는 소련을 무시했던 옛날의 태도를 변화시키면서도 정치적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울타리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외부에서 잘 이해하기 힘든 두 개 정체성의 공존 현상이다.<sup>53)</sup> 그럼에도 국가 정체성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보유하고 있었다. 고유하고 자부심을 낳는 핀란드어와 러시아에 병합된 이후에도 자체 의회와 행정부, 고유한 화폐를 사용한 장기간의 역사도 핀란드의 강력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셋째, 핀란드는 또한 초기의 위기대응 실패에 굴하지 않았고 해결책을 찾아낼 때까지 끈질기게 실험하는 자세를 보여준 나라이다. 소련과의 전쟁에서 해결책을 찾으려했던 전시 정책이 실패하자 1944년 이후에는 핀란드의 경제 및 정치의 독립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소련에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를 알아내기 위해 오랜 실험을 중단없이 하였다.

넷째, 핀란드는 타고난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소련이 원하는 행동과 정책을 먼저 선수를 쳐서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핀란드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행동할 수 있었고 이는 소련을 만족시키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들은 부여받고 갔다. 죽음을 불사하고 강대국에 예속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을 지켰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7가지 요소들은 동북아적 변용을 위한 성찰을 제공한다. 특히 정세의 급변과 헤게모니 전환기적 상황의 한가운데 위치한 한반도의 미래에 유용한 성찰을 제공한다. 이러한 변용과 적용은 IV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III. ‘핀란드화’ 아젠더의 계보학(系譜學)

여기서는 21세기에 들어와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는 ‘핀란드화’ 아젠더를 계보학(系譜學)적으

52) 제러드 다이아몬드, 앞의 책, p.121에서 재인용.

53) 이런 현상은 ‘핀란드화’를 경멸적인 용어로 사용되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로 정리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본래 지향했던 영역이 무엇이었으며, 아젠더와 논의들을 어떤 공간 속에서 집어넣으려고 했는지를 추적하고 분석한다.

## 1. 핀란드 사례 분석

원래 핀란드화를 아젠더로 삼은 목적은 냉전시기 핀란드-소련 관계, 즉 핀란드화(Finlandization)의 역사적 경험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핀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전면화되는 시점에서 소련과의 관계에서 구조화된 '핀란드화'를 분석함으로써, 냉전시대에 핀란드가 對소련 관계에서 독특한 형태의 중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을 추적하고 이를 모델화하려고 하였다.

1948년에 핀란드와 소련은 상호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핀란드는 친소 중립 노선을 걷게 되었다. 미국 주도의 NATO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소련 주도의 WARSAW에도 가입하지 않으면서 외형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핀란드는 1948년부터 소련이 해체된 1991년까지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소련의 외교와 안보에 관해서는 도전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요컨대, 핀란드는 냉전 종식 이전까지 소련의 외교정책에 자신의 외교정책을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핀란드의 전후 외교정책이 지극히 '현실주의'(realism)의 원칙에 지극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2차 대전의 전범국이라는 굴레 하에서 자국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핀란드의 선택은 2차 대전 중 유고슬라비아의 경험과 비교할 때 약소국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특이한 대안을 의미하였다.

## 2.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 아젠더

핀란드화 아젠더가 적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가 자주 언급되어 왔다. 즉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를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1300km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인구는 약 500만 명의 수국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미국 등의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의 관계는 핀란드화가 하나의 대안처럼 모색되는 경험이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한 채로 러시아의 영향력 안으로 편입되는 경우를 말한다. 푸틴 대통령 이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하였으며 급기야 우크라이나를 핀란드화시키려는 욕망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sup>54)</sup>

브레진스키(Z. Brzezinski)는 미국 등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주장하였고, 키신저(H. Kissinger)도 러시아와의 적대적 긴장관계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핀란드식 생존모델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sup>55)</sup>

## 3. 대만과 핀란드화 아젠더

54) "핀란드화(Finlandization)란? 러시아 눈치보는 핀란드 빛대 약소국의 종속적 자세 의미", 문화일보, 2016.8.24

55) "한반도에 핀란드화 먹구름이 몰려온다", 머니투데이, 2016.6.13.

대만과 핀란드화 아젠더를 연결시키는 논의의 핵심은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의미한다. 즉,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보호막을 철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대만의 핀란드화가 진행될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은 급변하게 된다.

대만의 핀란드화 논의는 두 개의 축으로 존재한다. 첫째, 대만의 핀란드화는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미중 간에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보충된다. 이는 대만이 20세기 냉전시대에 핀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자신의 국익 차원에서 대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IV. 한반도 문제와 핀란드화

### 1. 미국과 한반도 핀란드화

한반도와 핀란드화 아젠더는 본격적으로 논의된 주제 영역은 아니다. 한반도의 핀란드화 아젠더는 미국이 트루먼 정부 시기에 취했던 대한반도 정책이 그 발원지이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한반도의 핀란드화’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지지한 대통령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트루먼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한국과 대만을 경시하였다. 트루먼이 그러한 경시의 대가를 치른 것은 한국 전쟁이었고 급기야 1950년 한반도 참전을 결정하게 된다.

윤영관(2017)은 미국의 한반도, 일본,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찍 눈을 떴으나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에야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구한말 때 고종은 미국을 끌어들이어 일본, 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견제하려 했으나 미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제국주의 세력 일본과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무관심은 1950년 애치슨 선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공산세력의 동아시아 확산을 막는 보루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저극 개입했으며 한미동맹을 체결해 냉전시기 동북아전략의 한축으로 삼았다. 그렇게 냉전기 한미 동맹은 동북아에서 공산세력의 확산을 막아내는 전방기지 역할을, 미일 동맹은 후방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sup>56)</sup>

### 2. 한반도 핀란드화의 21세기 재생 구조

한반도 핀란드화 아젠더는 21세기에 또 다른 재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 사실 미소 간에 냉전이 종식되면서 냉전시기의 핀란드의 역사적 경험이었던 핀란드화라는 개념은 지구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용어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롭게 회자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중국의 글로벌 대국으로의 굴기(崛起)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중국은 경제대국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군사안보적으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한반도를 자신의 적극적인 행동반경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역내에서 역외세력인 미국의 군사력 개입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국도 중국을 함부로 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이는 미국의 행동을 동북아에서 적극적으로

56) 윤영관, “21세기 국제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지식의 지평』, 2017.5, 대우재단, pp.6-7.

제약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익차원에서 21세기 애치슨 라인이 고려될 수도 있는 환경이라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변화이다. 키신저는 2017년 경 공식적인 형식은 아니지만 ‘미중 빅딜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신저의 비밀 방중으로 1970년대에 형성된 미중협력 구조, 이른바 ‘키신저 질서’의 재형성인 셈이다. 북한의 민주적 변화와 비핵화를 중국이 선도적으로 해결할 경우, 주한 미군 철수 등 한반도 문제에서 미중 간에 빅딜(big deal)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핀란드화 아젠더에 대한 연구는 미중 간 헤게모니 경쟁과 대립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반도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을 통해 ‘핀란드화’ 아젠더가 갖는 비판성을 극복하고 한반도 미래(평화와 통일)에 대한 자주적 견해를 생산하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 3. 한반도에서 적용 가능성: 위상과 타이밍

케코넨 핀란드 前대통령의 “핀란드화는 수출용이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실제 역사적 모델 혹은 ‘핀란드화’ 아젠더를 핀란드 외부의 다른 지역에도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고조된 바가 있다. 가령, 중국과 여타 국가들(대만을 포함한)의 대립과 충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의 발생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핀란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이 현재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검토되고 있다.<sup>57)</sup> 그리고 최근 한국 내에서도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제시되어 온 해법 중에서 핀란드 모델의 적용가능성이 부정적인 입장으로서뿐 아니라 긍정적인 입장으로서 언급되고 있다.

사실 핀란드의 역사적 정책 모델인 ‘핀란드화’는 핀란드의 외교정책 시기와 외교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따라서 핀란드 모델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 없이 특정한 지정학적 상황에 핀란드 모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거나<sup>58)</sup> 핀란드가 역사적으로 제공하는 교훈과 성찰을 놓치게 된다. ‘핀란드화’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의 설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핀란드화라는 개념을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일방적인 종속 및 예속으로 규정하는 것은 핀란드 사례를 다소간 교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오히려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했던 핀란드라는 약소국의 생존전략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수 있을 것이다.<sup>59)</sup> 따라서 핀란드의 생존 전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성찰은 바로 가장 바람직한 ‘한국화’(Koreanization)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른바 핀란드화의 한국화인 셈이다.

핀란드화의 한반도 적용에는 다양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가령, 핀란드와 한국의 다양한 차원의 위상 차이, 핀란드화의 타이밍(timing)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계적 적용에 빠지기 쉽다. 첫째, 핀란드에서 이른바 ‘핀란드화’를 진행할 때 핀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으며 주로 농업과 어업에 치중했던 약소국가였다. 반면 2019년 현재 한국은 GDP 총량 규모에서 세계 10-11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군사안보 역량도 세계 10위권에 위치해 있다. 게다가 반도체 및 전자, 조선, 자동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수위의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은 핀란드화가 진행될 때의 핀란드와 같은 약소국가가 더 이상 아니다. 둘째, 핀란

57) 역설적이게도 정작 핀란드는 냉전 해체 이후, 소련과 체결한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폐기하였고, 소련이 반대했던 EU에 가입하고 NATO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58) 안상욱, “핀란드 외교정책 변화: 러시아 의존성 약화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5(4), 2017, p.84.

59) 문정인, “핀란드화라는 이름의 유령”, 『중앙일보』, 2014.6.9

드화가 진행될 때 핀란드는 냉혹한 냉전 체제의 환경 속에서 소련과의 관계를 안정화하면서도 서방 진영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맞추어야 했다. 반면 현재는 냉전이 해체되어 탈냉전 체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구축되었다. 핀란드화가 냉전의 산물이라면 한반도에의 적용도 그 타이밍에서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핀란드 자신도 탈냉전 체제로 진입하면서 소련과 체결한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폐기해 버렸고, 소련이 반대했던 EU에 가입하고 NATO와의 협력도 강화해 왔던 것이다.

## V. 결론

### : 핀란드화의 한반도적 성찰

지금까지 ‘핀란드화’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면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맥락에 핀란드화가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결국 핀란드화의 적용 문제는 새로운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적어도 중견국 이상의 위상을 가진 한국에 약소국 핀란드의 핀란드화를 적용시키는 것의 불편함과, 냉전체제에 핀란드는 약소국의 생존전략을 탈냉전 체제에서 한국과 한반도에다 그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타이밍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핀란드화의 경험과 그 아젠더를 한국 및 한반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인식론을 통해서 경유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제가 된다. 첫째, 하나의 국가로서 핀란드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난관과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노력과 방법, 철학과 신념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핀란드가 주변 강대국과 협상하고 관계를 설정했던 경험에서 유의미한 점들을 핀란드식 지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18-20년 사이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를 극복한 경험 사례와 방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있다.

#### 1. 핀란드 경험에서 도출되는 성찰

핀란드가 역사적으로 경험하면서 성공했던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들 요소들에 대한 탐색과 수용이 요구된다. <표1>에 근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제도적 노력(조약, 협정 등)을 통한 평화와 안보 문제를 실현해야 한다. 주변국과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문제와 더불어 남북한간의 평화와 안보를 실현하는 제도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둘째, 핀란드가 소련에게 그러했듯,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 신뢰를 쌓고 그러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정책적 전략적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 한국에게는 북한도 거기에 포함된다.

셋째, 외세에 의존하거나 주변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자주적이고 자조적인 방식으로 대외 관계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 적어도 한반도 주변국들 중 일부에서는 이미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를 좀더 원칙적인 수준에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모든 국가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끝까지 추구해 나가야 한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주변국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가능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북한을 만족시키는 문제도 포함된다. 북한이 포함됨으로써 좀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여섯째,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중 간에, 한러 간에, 그리고 남북한 간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제거하는 방식은 핀란드가 합리적으로 보여주었다.

#### 2.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테제로부터의 성찰



제러드 다이아몬드(J.Diamond, 2019)는 핀란드,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독일, 그리고 호주를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위기 전개의 양상과 해결 및 극복과정을 분석하면서 <표2>와 같은 요인을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이를 핀란드와 한국의 차이와 일치점을 통해서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성찰을 정리하고자 한다.

<b>&lt;표4&gt; 다이아몬드 지표: 핀란드와 한국</b>		
<b>지표</b>	<b>핀란드</b>	<b>한국</b>
1. 국민적 합의		
2. 국가적 책임의 수용	●	
3. 울타리 세우기	●	
4. 다른 국가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
5. 본보기로 삼을 만한 다른 국가의 사례		●
6. 국가 정체성	●	
7. 국가의 위치에 대한 정직한 자기평가	●	
8. 역사적으로 과거에 경험한 국가 위기		
9. 국가의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	●	
10.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	●	
11. 국가의 핵심 가치	●	
12. 지정학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	◎	◎

방법: 한국의 경우, 핀란드에 없는 것이 한국에 있는 항목에만 ●를 표기하였고, 양국에 모두 없는 것을 ◎로 표기하였음.

제러드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핀란드는 국민적 합의, 다른 국가의 지원, 다른 국가의 사례, 과거에 경험한 국가위기, 지정학 제약으로부터 해방 등에서 공백이 존재한다. 한국은 다이아몬드가 핀란드에 존재하지 않는 지표로 거론한 것들 중에 ‘다른 국가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지원’(지표 4)과 ‘다른 국가의 사례’(지표 5)가 존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과 같은 동맹 및 우방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지원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다른 국가의 사례, 즉 핀란드와 같은 국가의 사례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과 핀란드는 모두 ‘지정학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지표 12)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어떤 국가든지 지정학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냉전시기 약소국 핀란드에게는 일종의 지정학적 저주에 근접한 지표에 해당했다. 어쨌든 이 지표는 핀란드와 한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유점’이기도 하고 양국간에 중요한 차이를 유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한국과 핀란드는 지정학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여서 운신의 제약을 강력하게 받았다. 이는 자주적이라기보다는 종속적인 대외관계를 강요받는 구조로 더 작동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숙명적인 지정학은 핀란드와 한국의 21세기 현재와 같이 중진국 및 강대국적 위상에 근접할수록 그 숙명은 장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주변 강대국에 영향력을 끌고루 행사하면서 자주적 외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핀란드화로부터 도출되는 긍정적인 성찰을 정리한다. 첫째, 핀란드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책임을 수용하고 현실적인 자기평가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었듯이 한국 또한 자

신의 운명에 도전해 오는 요소들에 대해 책임감 있게 수용하고 현실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핀란드가 선택적 변화와 울타리 세우기에 성공했듯이 한국 또한 주변국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한국의 보편적 가치와 민주주의 국가의 울타리를 더욱 강력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셋째, 핀란드가 초기에 위기대응에 실패했지만 굴하지 않고 해결책을 끝까지 찾아내었듯이 한국도 한반도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낼 때까지 끈질기게 실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를 위해서 주변국에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할지 끈질긴 실험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핀란드가 소련에 대해서 타고난 유연성을 발휘했듯이 주변국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알아내어 이의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면서 대외 관계에서 오히려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주변국들에게 신뢰감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핀란드화’ 과정에서 수행했듯이 한국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안상욱, “핀란드 외교정책 변화: 러시아 의존성 약화를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편, 『유럽연구』 35(4), 2017.12.
- 강광식, 『중립화 정치론: 한반도 적용 가능성 모색』(서울: 인간사랑, 1989).
- 김진호, 강병철, “스웨덴과 핀란드의 중립화의 정치: 국제-지역-국내 정치의 다이내믹스”, 『유럽연구』, 제25권 제3호 (2007)
- 김진호, “핀란드의 편승적 중립정책”, 『세계정치11』, 제30집 1호 (2009년).
- 지정일, “스칸디나비아 諸國의 안보정책”, 『유럽연구』 제1권(1983).
- 이기탁, “핀란드의 중립외교정책(1941-1983)”, 『유럽연구』 제1권 (1983)
- 김진호, “핀란드 중립정책에 대한 고찰과 교훈”, 『통일문제연구』, 제15권 1호 (2003).
- 하용출, 박정원, “약소국의 자주외교전략: 유럽 사례를 통해 본 가능성과 한계”, 『전략논총』, 제9호(1998).
- 윤영관, “21세기 국제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지식의 지평』, 2017.5, 대우재단.
- 문정인, “핀란드화라는 이름의 유령”, 『중앙일보』, 2014.6.9.
- 문정인, “한반도 통일과 통일외교의 재조명”, 『철학과현실』, 2015.12.
- 제러드 다이아몬드 지음, 강주현 옮김, 『대변동』 (서울: 김영사, 2019),
- 문정인, “한반도 통일과 통일외교의 재조명”, 『철학과 현실』, 2015. 12.
- 강명세, “약소국의 생존정책”, 『세종정책연구』제3권 1호(2007).
- 박후건, 『중립화 노선과 한반도 미래』(서울: 선인, 2007).
- 장은주, “겨울전쟁과 북유럽의 중립정책”, 『세계역사와문화연구』 20호(2009).
- 서현수, “핀란드 중립 평화 외교정책의 형성과 진화”, 『스칸디나비아연구』제22호(2018).
- Allan A. Kuusisto, “The Paasikivi line in Finland’s Foreign Polic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1(1959), pp.37-50.
- R. M. Wharton, “Finlandization-Neutering of a Nation”, *Human Events*, Vol.38, No.15(1978), pp.8-13;
- Sakari Saridla, “Finland and Finlandization”, *History Today*, Vol.32, No.3 (1982), pp.20-27;
- Kent Forster, “Finland’s Foreign Policy 1940-41: An Ongoing Historiographic Controversy”, *Scandinavian Studies - Menasha -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candinavian Study*, Vol.51, No.2(1979), pp.109-124.
- Tuomas Forsberg & Matti Pesu, “The Finlandization of Finland: the Ideal Type, the Historical Model, and the Lessons Learnt”, *Diplomacy & Statecraft*, Vol.27, No.3(2016), pp.473-495.
- Roy Allison, *Finland’s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1914-1984*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5), p.2.
- Melvin J. Lasky, “Finlandization: Not the Worst Fate”, *The New York Times*, June 14, 1979.
- David Vital, *The Survival of the Small States: Studies in Small Power/Great Powe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pp.99-117.
- Rovert Espindola, “Security Dilemmas”, C. Clarke, et al, (ed.), *Politics, Security and Development in Small States* (London: Allen & Unwin, 1987), pp.75-78.
- Johan Vloyantes, “Finland”, S. V. Papacosma, et. at. (ed.), *Europe’s Neutral and Nonaligned States: Between NATO and the Warsaw Pact* (Delware: SR Books, 1989), pp.137-155.

- Max Jakobson, *Finnish Neutrality* (New York: F.A. Praeger, 1967), p.110.
- Harto Hakovirta, *East-West Conflict and European Neutrality*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p.70-71.
- Steven Zaloga, *Gustaf Mannerheim* (Osprey, Oxford, 2015).
- Raymond Aron, *Paix et Guerre Entre le Nations* (Paris: Calman-Levy, 1962), p.501.
- “핀란드화(Finlandization)란? 러시아 눈치보는 핀란드 빛대 약소국의 종속적 자세 의미”, 문화일보, 2016.8.24.
- “한반도에 핀란드화 먹구름이 몰려온다”, 머니투데이, 2016.6.13.
- Allan A. Kuusisto, “The Paasikivi line in Finland’s Foreign Polic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1(1959).
- R. M. Wharton, “Finlandization-Neutering of a Nation”, *Human Events*, Vol.38, No.15(1978)
- Sakari Saridla, “Finland and Finlandization”, *History Today*, Vol.32, No.3 (1982).
- Kent Forster, “Finland’s Foreign Policy 1940-41: An Ongoing Historiographic Controversy”, *Scandinavian Studies - Menasha -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candinavian Study*, Vol.51, No.2(1979).
- Tuomas Forsberg & Matti Pesu, “The Finlandization of Finland: the Ideal Type the Historical Model, and the Lessons Learnt”, *Diplomacy & Statecraft*, Vol.27, No.3(2016).